

방역지침 미준수 '무관용 원칙' 으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따라 처벌도 특사경팀, 수칙 어리고 영업한 음식점 8곳 적발

전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지침 미준수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나선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 8일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음식점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음식점 8곳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하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팀은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의 다중밀집지역에 시·군과 함께 30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240개소를 점검한 결과, 전주시 1개소, 군산시 3개소, 익산시 3개소, 완주군 이서면 1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전북도 특사경 및 시·군(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합동단속으로 실시했고, 민간 감시원인 생활안전지킴이를 활용해 유동인구가 많은 변화가 주변의 감시활동도 강화했다.

적발된 사례는 주로 야간에 영업하

는 바(Bar) 형태의 술집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있으며, 업소 간판을 꺼서 내외부를 어둡게 하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대응하고,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된 업소는 유흥시설은 형사고발, 음식점·카페 등은 영업자는 최대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적발된 일부 업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점관리시설의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 식당·카페 등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1시 이후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잘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특사경팀은 "도민들의 방역의식이 많이 고취됐으며, 그동안 많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들은 전주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관련해 오후 9시 이후 운영하는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홍보와 계도 활동을 꾸준히 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영원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확진자가 다시 발생하는 등 지역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사회적 재난 상황임을 인지하고, 개인방역 및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

했다.

이어, 김 실장은 "도민들도 방역지침 위반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 신고제보 전화 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지방자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인구 100만명 되지 않더라도 균형발전 고려 행안부장관이 재정 운영 특례 근거도 마련

지방의회 의장, 사무처 인사권 정책 지원 전문가도 둘 수 있어

경기 수원·고양·용인 및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오후 개최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재석 272인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으로 가결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난 1988년 이후 지역의 숙원이었으나,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이날 32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에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인 경기 수원·고양·용인 및 경남 창원에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특례시는 행정 및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특례를 둘 수 있다. /뉴스

또한 인구 100만명이 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지역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 운영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할 권리가 담겼다. 주민이 조례·규칙의 개정·폐지를 요구하면 지자체 장은 30일 이내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은 기존 5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 연령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주민투표로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도 있게 된다.

지방의회 독립성도 강화된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게 되고, 정책 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는 의무화된다.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 주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의무를 갖게 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균형발전 관련 국가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된다.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뉴스

'고창 고리포항 어촌뉴딜 300 선정'

민주 윤준병 의원 국비 70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9일, 해양수산부 21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고창 고리포항이 선정되어 국비 70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상하면 자룡리에 위치한 고리포는 갯벌, 수산자원, 자연경관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해 성장잠재력이 풍부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서 혁신성장을 주도할 기본 인프라·콘텐츠 발굴 및 개발을 통해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촌 뉴딜 300 전북 4곳 선정, 어촌에 활력'

민주 이원택 의원, 발표 전까지 해수부 설득 "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

'어촌 뉴딜 300사업'에 전북지역 5개소가 선정돼 신청대비 선정률 전국 2위로 나타났다.

'어촌 뉴딜 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특화개발을 추



진, 어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선정자료에 따르면 전국 60개소 선정대상지 중 전북은 15개소를 선정해 5개소가 선정됐고, 이는 신청대비 선정률 33.3%로 강원(44%)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이번 결과는 각 지자체의 성실한 준비도 있었지만, 전북지역의 유일한 국회 농해수위원회인 이원택의원

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차관 및 주무부서를 끊임없이 설득해 이뤄낸 값진 결과이기도 하다.

이원택 의원은 "어촌뉴딜300사업을 계기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침체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해 새로운 소득기반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전북지역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전북지역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된 곳은 군산시 두리도항과 서래포구항, 고창군 고리포항, 부안군 왕포·작당항, 치도항, 등 5개소이다. /유호상 기자

도내 기초의회 의정 소식

전주시의회, '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코로나 등 재난 상황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재난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8일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원(중양·완산·중화산·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는 버스기사와 환경미화원 등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주시는 이들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근무환경개선 및 보호를 위한 조사와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이 존중 받는 사회적 분위기

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의료·돌봄종사자·배달업 종사자·환경미화원 등 일상 유지 및 지역사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는 핵심 필수업종 및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기동 의원은 "조례 제정이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주시에게 맞게 구체화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향후 전주형 필수노동자 지원 방식과 정책적 로드맵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전주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식 기자

불법 입국·무증상 확진자 외국인 본국 송환 법적 근거 마련

이용호 의원,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유입에 따른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8일,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 장으로 하여금 '불법입국 및 무증상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본국으로 송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료진을 비롯해 병상과 격리시설 등 의료 및 방역자원 부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법'이나 '감역법'을 위반해 입국 후 감염병 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한정된 의료 및 방역자원을 경증의 외국인에게까지 투입하는 것

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입국 서류를 위·변조하는 경우가 불법 입국의 대표적 사례이다.

지난 7월 13일부터 시행한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르면, 방글라데시,필리핀,네팔 등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책 시행 이후 외국인이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해 입국, 총 12건이 적발됐지만,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유호상 기자

고창군의회, "한빛원전 위험요소 발생 관련자 처벌을"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최근 제 27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빛원자력본부는 영랑 원전 위험요소 발생에 따른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철저히 수립하라"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최근 영랑 한빛원전 3호기가 보수공사를 마치고 전면 가동에 나섬에 따라, 각종 의혹과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동안 영랑 한빛 재력발전소는 원자로 격납건물 공극문제, 증기발생기 내부 망치 발견, 열 출력 급증, 납품 비리 및

보중서 위주 등 반복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고창군 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그 위험성을 감당해 왔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한빛원전조사특별위원회 조규철 위원장은 "각종 안전 문제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한빛원전의 재가동을 위한 결정과정에서 고창군민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재가동에 나선 것에 대해 고창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마무리단계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 고창2)는 9일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7일째 이어갔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역교육청 및 미진했던 부서의 예산안과 지난 8일에 중앙부처로부터 변경 및 추가내시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전북도 수정예산에 대해 심의한 뒤, 늦은 오후부터는 문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전북도지사가 제출한 8조 7,462억원 규모의 예산안과 전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 4,249억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는 이번주 중에 마무리돼 2021년 새해 예산규모가 드러날 전망이다.

예결특위에서 조정심의된 예산은 오는 14일 제377회 정례회 폐회시에 상정돼 확정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민간조사 전문기업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010-5636-7755

907호